

유학생은 언제까지 학교의 ‘소모품’이어야 하나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유학생 사회 내부에서 ‘유학생 지원 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학교가 작년에 이어 올해 전국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수 1위에 올랐고, 이에 힘입어 국제화 지표가 높아진 결과다.

지난 5년간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리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711명, 2016년 2,071명, 2017년 2,317명, 2018년 2,770명이었고 올해는 2,845명에 이른다. 2015년과 비교해봤을 때 5년 사이 66%가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연수와 정(어학연수, 교환학생) 중인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4,727명에 달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26,430명의 1/6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증가폭을 끌어낸 배경엔 외국인 학생 유치에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2012년부터 교육과 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20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학생 장학 기금인 GKS 기금을 설치해, 현재 연 2,000억원 규모의 유학생 대상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고등교육법> 제 30조 7항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을 선발하는데 법률적 제한이 없다.

우리학교도 이를 준용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학교 학칙 90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원 외 입학에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인원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한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국제교류처 서경아 팀장은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체 재학생의 10% 이내로 선발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학과는 입학사정위원회와 각 단과대 학장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가이드라인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란 정량적 성과에만 매달린다는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도 존재했다. 니키(국제학 2018) 씨는 “한국의 대학평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총 인원 수가 주요 평가 항목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다른 대학과 인원수 경쟁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원제도의 허점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새 학기, 설렘과 막막함 사이/대학주보 제1651호 5면, 2019.09.19.) ▲주거 ▲의료 등 학교 밖의 생활 영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우리학교의 유학생 수 꾸준히 증가... 1,711명(2015년) → 2,845명(2019년)

유학생 당사자 “학교는 단순히 정량적 성과에만 매달려 우리의 의견이 무시된다”

국제교류처 “현재 단계별로 유학생 문제 개선 중에 있지만 당장의 수요에는 못 맞춰”



학교 일대를 바라보면 많은 유학생을 위한 여러 언어의 제품광고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총 인원수가

대학 평가 주요항목이라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듣기보다

인원수 경쟁에 몰두해

”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장 첫 번째로 당면하는 과제는 바로 살 곳을 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양캠 모두 기숙사 인원 모집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울캠은 세화원, 국제캠은 우정원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때 양캠 유학생들에게는 ‘행복기숙사’나 ‘제2기숙사’ 같은 신식 기숙사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캠 국제교류처 산하 학생단체 ‘IFCC’ 회장 이준석(언론정보학 2014) 씨는 “유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의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이 점 때문에 자취방을 구하려는 유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외국인지원팀은 “세화원 뿐만 아니라 캠퍼스 밖 유학생 전용 거주시설과 같은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숙사 시설에 불만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은 학교 밖에서 살 곳을 찾게 된다.

국제캠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문제는 학교 밖의 상황에 학교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역할은 국제교류처 산하 학생단체의 몫이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유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국제캠 국제교류처 산하 학생단체 ‘KHUddy’ 회장 김선봉(국제학 2018) 씨는 “유학생의 자취방을 알아보면서 학교에 문의했더니 나중에 방을 구하면 알려달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며 “물론 학교 밖의 시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학교가 체계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쓰이는 비용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유학생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학에게 여건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90일 미만의 비자(C3 유형)를 소지하고 있는 단기 연수생도 포함된다.

우리학교에서도 이를 일정 부분 준용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의무적으로 ‘외국인유학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학교와 보험업체의 연계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행된다.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면 된다. 서울캠 외국인지원팀은 “학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하는 유학생은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보험 서비스에 전 유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은 학교-보험업체 연계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2019년도 1학기부터 우리학교와 교환학생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라(국제학 2019) 씨는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활동할 때, 당시 학교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보험이 있었다”며 “한국에선 학교가 보험뿐만 아니라 교환학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캠 국제교류처 IFCC 회장 이씨는 “지난 학기에 보험이 없었던 교환학생이 골절상을 당했는데, 병원비가 600만 원이 나와서 IFCC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다”며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환학생에게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가 구성된 바 있다. TF에는 국제교류처장, 외국인지원팀, 각 단과대 행정실 관계자, 학생 대표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참여했다.(유학생 위한 TF 구성, 내실있는 국제화 위한 걸음 시작/대학주보 제1640호 3면, 2018.11.05.)

학교 측은 매년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선 TF만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교류처 서 팀장은 “TF에서 외국인 학생 상담 프로그램 확대, 영어강의 인프라 개선과 같은 고무적인 내용이 많이 논의됐다”는 반면 “현재 단계별로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수요에는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e are completely lost.”우리(유학생)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앞서 우리학교가 ‘유학생 인원 수 늘리기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니키 씨의 일말이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모든 것을 쏟아내도 되는 시기는 지났다. 지금부터는 유학생 지원 제도에서의 섬세함이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